데스크 시각

공천은 당선?

홍 행 기
정치부장

"8대0 아니면 0대8일겁니다." 제20대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2016년 3월 중순께, 광주에서 지역 언론사 정치부장단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나 총선 결과를 예측하던 중 돌출한 발언이다.

광주 국회의원 의석수가 8석이라는 점에서, '8대0'이라는 결과는 당시 광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가운데 어느 한쪽이 싹쓸이를 한다는 의미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의당이 인기몰이를 하곤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2~3석은 지킬 것으로 점치는 이들이 많았던 만큼 모두가 발언자인 A의원의 얼굴을 쳐다봤다.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선거구다. 바람이 불면 모두가 같은 쪽으로 움직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광주 총선은 한쪽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모두 고개는 끄덕이면서도, 중론은 '민주당에 힘든 선거가 될 테지만 2~3석은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모아졌다. 하지만, 4월 13일 치러진 총선 결과는 그 의원 말대로 국민의당 8, 민주당 0이었다. 전남에서도 전체 10석 가운데 8석을 국민의당이 가져갔고, 민주당은 1석을 얻는데 그쳤다.

'녹색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이 광주·전남 지역 18개 의석 중 16개를 휩쓴 4·13총선 결과는 '호남의 맹주'를 자처해 온 민주당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물론 민주당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선전하면서 전국 제1당으로 올라서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적으로는 '한국 정치의 본산이자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다.

호남 양당체제 효과 '반짝'

호남사람들의 '전략적인' 투표는 1996년 15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전국적으로 3당 체제를 정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호남에선 실질적인 양당 체제가 구축됐다. 호남 텃밭을 지키려는 국민의당과 호남 맹주 자리를 되찾으려는 민주당의 치열한 경쟁은 새 정부 들어 호남 인사 중용과 호남 예산 증액이라는 뚜렷한 성과로 돌아왔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Casting voter)라는 위치를 적극 활용, 정부를 압박해 각종 정책과 예산 지원을 이끌어 냈다. 민주당도 여당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앞세워 정부 요직에 호남 인사를 기용하고 각종 정책과 예산에 호남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왔다. 호남만을 놓고 보자면, 본격적인 양당체제가 구축됨으로써 호남의 이해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관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과거 특정 정당이 호남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공천=당선'이라는 낡은 공식이 이제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꽂아 놔도) 당선이 보장됐다는 점에서 호남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는 후보자들이 지역 민심보다는 당의 눈치를 중시해야 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치열한 후보 경선전이 마무리되면 본선거 때까지는 오히려 맥 빠지는 선거전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그동안 호남 선거의 뒷모습이었다. 그런 점에서, 지역민들은 호남에서의 양당 체제가 들어선 이번에야말로 각 당이 최선의 후보를 지역민에게 선보이고, 각 후보들이 민심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예상했다.

하지만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그 같은 모습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호남 의석을 석권한 국민의당이 극심한 내분으로 흔들리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당선'이라는 진부한 공식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낼 공산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다시 '막대기 선거' 되나

실제로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지금, 민주당에선 후보가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국민의당에선 출사표를 내미는 이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지역민으로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후보를 만나 볼 기회를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정치는 국민이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의 모습과 시스템을 규정하고, 정치인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반영·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민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다. 하루빨리 국민의당 혼란이 정리되고 각 정당 후보들이 경쟁다운 경쟁을 펼쳐 지역민들이 즐거운 고민에 빠지게 되길 기대한다.

은펜칼럼

인성이 기본이다

김 창 균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살을 에는 엄동설한에도 따뜻한 구들방에서 나누는 옛이야기는 겨울을 보내는 삶의 지혜였다. 예전의 정취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지만, 여전히 옛이야기의 구수함은 폭설과 강추위를 잊기에 제격이다. 소일거리로 찾아든 설화집을 넘기다 보니 과거(科擧)와 관련된 이야기가 눈에 띈다.

숙종 임금이 야행(夜行) 중에 태학관의 한 방만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기에 찾아가 보았다. 사촌 형제 둘이 글을 한참 읽다가, 종제(從弟)가 문득 형에게 자기 장가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첫날밤에 각시가 아기를 낳았는데, 발설하면 산모와 아기가 위태로울 듯해서 아기를 백양교 밑에 숨겨 놓고 사람을 보내 대고모 댁에서 기르도록 하였다는 이야기다. 이를 엿들은 숙종 임금은 다음날 별시(別試)를 시행하며 시제(試題)를 '백양교하(白楊橋下)에 득옥동자(得玉童子)하여 양탁어대고모댁(養託於大姑母宅)'으로 내걸었다.

이후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터이다. 시제의 내력을 아는 형제의 급제는 당연지사다. 요즘으로 치자면 일종의 특채가 이뤄진 셈이다. 그것도 불공정한 특혜를 통해서 말이다. 과거 시험은 신분 차별을 뛰어넘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시험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미담처럼 이야기가 전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중이 기대하는 왕권의 바람직한 실현상을 설화적 상상력을 통해 구현한 것이 임금의 야행 설화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이야기에는 사회에 필요한 참된 인재 발탁과 관련한 우리 조상들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태학관에서 글을 읽을 정도의 선비면 가난하거나 억울한 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해 임금이 실시한 별시를 긍정시한 이유는 이들이 인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1558년(명종 13년) 생원회시(生員會試)의 책문(策問)은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과 인재 양성 방법'에 대해 논하는 것이었다. 이때 급제한 조종도(趙宗道)는 당대의 교육이 글을 외고 읊으며 글과 문장을 다듬어 벼슬과 봉록을 구하는 방법이 되고 말았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교육이란 '처음에 효도와 공경과 충직과 신뢰를 가르치고, 끝에 가서는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행실을 바로잡고 지적인 성숙을 도와주어 학문의 진리를 스스로 터득하고 깊이 젖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도 유효한 깨우침이다. 군둘라 엥리슈(Gundula Englisch)는 '잡노마드 사회'에서 기존의 교육을 목표 지향적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학교 졸업 후 취직을 목표로 하고, 목표가 이뤄짐과 동시에 교육 과정이 끝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새롭고 특이한 것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며 탐구적인 자세로 내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마디로 '배우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 능력, 팀워크 정신과 설득력 같은 창의적이며 유연한 태도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전체와 어울려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옛날 선비들이 꼭 익혀야 할 덕목으로는 육예(六藝)라 하여,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를 꼽았다. 예절, 즉 인간다움이 가장 먼저요, 글쓰기와 셈은 끝에 있었다. 딱한 처지에 놓인 이들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나아가 위기 상황을 해결할 방책을 슬기롭게 강구할 줄 알았던 옛이야기 속의 선비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참된 인재상으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도 여지없이 부합한다.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감성과 공감 능력은 미래 사회에서도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앞으로의 교육은 교육의 근본인 인간 그 자체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여, 협력과 나눔을 통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올바른 인성과 협력적 배려심을 기르는 데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옛이야기에서 찾아본다.

기 고

'지방 분권 개헌' 청원 서명운동, 왜 필요할까요?

박 세 철
지방분권전남연대 공동대표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지방 분권'과 '지역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은 발전을 멈추고 급속도로 소멸의 단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예정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제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지방분권 운동가들에 의하면 '지방 분권국가'가 되면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고, 선조치 후 보완이라는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즉, 1분 1초가 다급한 비상사태에서 중앙정부(대통령)에 보고하고 지시받는데 신경 쓰느라고 정작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일을 못해서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은 '개헌' 하면 '기본권 강화'나 '권력 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등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지방 분권 개헌'도 매우 시급하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할 만큼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자기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사생결단을 하고 치열하게 '지역주의' 선거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나라는 철저한 '중앙 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를 고수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할 수 있는 최적기이다.

지방 분권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에 '지방 분권국가' 천명,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 명시, 국회 '양원제'(지역 대표를 상원으로)도입, '지방 정부' 명칭 규정, 자치 입법권·자치 행정권(조직권)·자치 재정권 규정, 직접 민주 정치 제도 강화(헌법 개정 국민 발안제 및 국민 소환제 도입, 국민 투표제 확대) 등이다.

그런데 '지방 분권'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 막고 있는 세력들이 국회나 정부 내에 상당이 존재하고 있다. 아무래도 보수 성향 국회의원들이나 행정 관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기가 싫을 것이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려 개탄스럽다. 정치적 셈법 때문에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 와중에 '지방 분권'의 꿈도 날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국민 중에서도 '자치 역량'이 부족한 자치단체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무작정 '지방 분권'을 해서 막대한 양의 중앙 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면 '그들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반대 론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격언처럼 지나치게 역기능과 부작용을 우려해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닐까? '지방 분권'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과 더불어 '지방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면 된다. 즉 지방 선거를 깨끗하고 현명하게 잘해서 최적 인물을 뽑고, 선량들을 잘 감시하고 견인하며,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과 예산을 많이 제공하여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활성화하면 된다.

지난 정권 시절 어린이집 예산 파동이나 메르스 사태 때 지방자치단체가 도리어 중앙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지방 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 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 분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정부의 의지나 지역 정치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속담처럼 결국 지역민들이 절박감을 가지고 스스로 제2의 촛불을 들 만큼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방 분권 개헌' 청원 서명운동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은 이미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그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계신 국민이 많은 것 같다. 이제 호남 지역민들도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지방 분권 개헌' 청원 서명에 적극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社 說

'전라도 천년 기획' 호남 상생 기폭제 돼야

정도(定道) 천년을 맞아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전라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미래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펼친다.

3개 시도는 우선 전주와 나주의 앞 글자를 따 전라도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1018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천년 기념일을 오는 10월 18일로 정했다. 지난 1일 광주에서 '천년맞이 타종식'을 연 데 이어 3월에는 전남에서 '천년 가로수 길 조성 기념식'을, 10월 18일에는 전북에서 '천년 기념식'을 진행한다.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천년 기념사업은 모두 30건으로, 46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한다. 눈에 띄는 것은 지역 간 화합과 유대감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이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과 전라도 방문의 해 운영, 전라도 대표 관광지 청소년 문화 탐험단, 전라도 아트·버스킹 페스티벌 등이다. '전라도 천년 캠페인'도 공동으로 진행한다.

광주·전남·전북은 그동안 공동 운명체였지만 전라도가 3개 시도로 쪼개지고 극심한 정치적 소외를 겪으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쟁하다 보니 틈이 벌어진 것이다. 광역 경제권이나 국제공항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3개 시도 협의체인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6년씩이나 중단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하지만 민선 6기 출범 직후, 시도 간 소통 채널이 재가동됐다. 이를 고려할 때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념행사에 머물지 않고 3개 시도의 경쟁력을 높여 새 천년을 여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한 경쟁에서는 협력과 배려를 통해 서로 지원하고 규모를 키우는 전략적 상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 신설, 수요 예측 잘못 예산 낭비 없도록

광주에서 최근 4년 새 신설된 학교 10곳 중 무려 4곳이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신도시나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학교를 신설하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4년 새로 지어진 광주 학교 수는 10개교였는데, 이중 개교 3년 후인 2013년~2016년 실제 학생 수용률이 70% 미만인 곳은 절반에 가까운 4개교나 됐다. 전국의 정원 미달 신설 학교 평균 비율에 비해서도 10%가량 높은 수치다.

시교육청의 학생 수요 예측이 빗나간 학교는 대부분 새로운 주거단지 형성에 따라 신설된 곳이다. 아파트가 건설되면 입주로 인해 인구가 늘 것이고, 당연히 학교가 필요할 것이라는 안이한 수요 예측이 부른 착오이다.

광주시의 인구는 2010년 147만 5745명을 기록한 이래 지금까지 의미 있는 변화는 없으며 2017년 9월 기준 146만 6639명이었다. 여기에 신생아 수는 2014년 1만 2729명, 2015년 1만 2441명, 2016년 1만 1580명으로 매년 수백명씩 줄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령 인구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우선 구별·동별·학군별·학교별 학령 인구 추이를 면밀히 분석·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토대로 개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신설 대신 주변 학교에 학생을 적정 배치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정 지역에 인구가 유입된다는 이유로 학생 수가 늘 것이라는 극히 산술적인 판단에 따른 학교 설립은 예산을 낭비할 뿐이다. 학부모들 입장에서야 편리성만을 따져 학교 신설을 요구할 것이다. 당연히 주민을 위한 학교 신설은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의 무리한 학교 신설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한다.

無 等 鼓

'천년 나무'

광주에서 가장 멋진 가로수 길이 어디냐 물으면 주저 없이 대남로(백운로터리~남광주시장)의 느티나무 길을 꼽는 이들이 많다. 1980년대 중반 조성됐으니 30년이 넘었는데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사철 멋진 풍광을 자아낸다.

봄이면 연초록 새싹이 해맑은 얼굴을 내밀고 여름이면 한 그루당 500만 장에 이르는 이파리로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가을철 곱게 물든 낙엽도 단풍나무 못지않고 이파리를 떨군 수형(樹形)이 빚어내는 설경은 나목(裸木)의 진수를 보여 준다.

느티나무는 예부터 우리와 가장 친숙한 나무였다. 마을 당산나무와 정자나무도 대부분 느티나무라고 보면 틀림없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이지만 보호수로 지정된 소나무가 1000그루에 불과한 데 비해 느티나무는 5500그루가 넘는다. 수명도 길어 국내에 있는 1000년 이상 된 나무 60여 그루 가운데 25그루가 느티나무다.

느티나무에 얽힌 이야기도 많은데 전북 임실에 있는 오수(槭樹)도 느티나무다. 김개인이란 사람이 총명한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주인이 낮술에 취해 풀밭에서 잠든 사이 불이 나자 개가 온몸에 물을 적셔 주인을 구하고 죽었단다. 잠에서 깬 주인이 사실을 알고 고이 묻어 준 후 지팡이를 꽂았더니 느티나무가 됐다는 이야기다. 그 뒤부터 이 나무를 개 '오'(槭) 자와 나무 '수'(樹) 자를 써서 '오수'라 하고 마을 이름도 오수로 바꿨다고 한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전남도가 '천년 나무'로 지정한 해남 대흥사 느티나무에도 전설이 깃들어 있다. 옥황상제가 살던 천상에 천둥과 천녀가 살았는데 어느 날 계율을 어겨 지상으로 쫓겨나게 됐다. 이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 만에 불상을 만드는 것인데 거의 불가능해 이 나무에다 해가 지지 못하도록 끈을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1100년 된 대흥사 느티나무가 강진 푸조나무와 진도 비자나무를 제치고 천년 나무가 된 것은 수령도 수령이지만 남도의 애환과 역사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느티나무에는 열린 광장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반목과 갈등, 아픔과 상처를 내려놓고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느티나무 광장이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